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

책임실과 책임추구를 위한 토론회
실체진실과 책임추구를 위한 토론회

사회_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의 발생 구조를 묻다

김혜정_ 한국성폭력상담소

피해자 고소 이후 경과와 문제점

송란희_ 한국여성의전화

사건 쟁점과 법적/사회적 규명 과제

김재련_ 피해자 변호사, 공동변호인단

성평등 운동사에 기반하여 서울시장 사건보기

신경아_ 한림대 사회학과

‘성폭력 부정주의’와 한국정치 구조

권명아_ 동아대 젠더어펙트 연구소

여성운동자의 언어를 복원하기

이라영_ 작가

미디어를 통해 본 위력 성폭력사건의 문제

윤여진_ 언론인권센터

공론장과 ‘진보’의 재구성

김수아_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 종합토론

2020. 12. 17.
PM. 7
유튜브 생중계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

실체진실과 책임추구를 위한 토론회

- 일시 : 2020년 12월 17일(목) 저녁7시
- 장소 : 웨비나
- 주최 :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 사회

-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 패널 발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의 발생 구조를 묻다 _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1
피해자 고소 이후 경과와 문제점 _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6
사건 쟁점과 법적/사회적 규명 과제 _ 김재련(피해자 변호사, 공동변호인단)	14
성평등 운동사에 기반하여 서울시장 사건 보기 _ 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	22
'성폭력 부정주의'와 한국정치 구조 _ 권명아(동아대 젠더어펙트연구소)	25
여성노동자의 언어를 복원하기 _ 이라영(작가)	29
미디어를 통해 본 위력 성폭력사건의 문제 _ 윤여진(언론인권센터)	33
공론장과 '진보'의 재구성 _ 김수아(서울대 언론정보학과)	36

■ 종합토론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의 발생 구조를 묻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문제 인식까지도 오래 걸렸고, 문제 제기까지는 더욱 오래 걸린 사건입니다.
피해자로서 보호되고 싶었고,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 “그 어떤 편견도 없이, 합리적 절차에 따라“ (2020.7.23 피해자의 글 중)¹⁾

1. 반복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위력 성폭력, 퇴행하는 문제해결

2018년 1월말 #미투 말하기를 한 현직 여성검사는 8년전 성추행 사건과 그 이후로 이어진 업무상 불이익을 꺼내 말했다. #미투가 한국사회를 달구던 시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비서에게 “너도 미투 할 거냐?”라고 묻고는 침묵을 연장하게 하고 성폭력을 반복했다.²⁾ 3월, 충남도지사에게 의한 업무상 위력성폭력을 피해자가 고발하고, 긴 법정 투쟁을 벌이며 위력성폭력을 사회적 의제로 만드는 동안, 전 서울시장도 비서에게 텔레그램을 주의해서 지우라며 성폭력을 행했다. 2018년 함평군수와 장성군수³⁾, 2020년 4월 전 부산시장 등 지방자치단체 장에 의한 성폭력을 알린 피해자들의 노고까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그만큼 두려운 일이었는지 여전히 그러할지 새삼 생각한다. 그리고 분노와 좌절 속에서 질문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는 이유와 구조는 무엇인가? 누가 책임을 지고 있고, 또 예방하고 있는가? 혹은 또 다른 피해자가 지금도 침묵하며 하루를 버티고 있을 것인가.

박 전 시장이 2020년 7월 고소된 혐의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강제추행이다. 피

1)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 “그 어떤 편견도 없이, 합리적 절차에 따라“ 2020.7.23

http://www.sisters.or.kr/load.asp?sub_p=board/board&b_code=2&page=6&f_cate=&idx=5590&board_md=view

2) 김지은(2020), 『김지은입니다 - 안희정 성폭력 고발 554일간의 기록』, 봄알람, 14쪽

3) 전 함평군수와 현 장성군수에 의한 성폭력 고소사건 모두 피해자가 고소한지 1년 8개월이 지나 1심 판결이 이루어졌다

'군청 직원 성추행' 안병호 전 함평군수 징역 1년 6개월 (한국경제, 2019.12.19 11:24)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2198233Y>

'장성시민연대, '성폭력 가해자' 장성군수 사퇴 촉구' (프레시안, 2018.7.16 18:15)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3898#0DKU>

'강제추행 혐의' 유두석 장성군수 무죄' (연합뉴스, 2019-12-18 10:25)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8057700054>

해자는 “문제 인식까지도, 문제제기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렸고, 피해자로서 보호된 채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긴 법정 싸움 도중이 아니다. 피고소인, 피의자 상태에서 전 서울시장인 피해자 고소 직후 스스로 망인이 되었다. 현재 업무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도, 업무폰에 대한 포렌식도 시작되지 못한 채, 그대로 교착된 채 5개월이 지나고 있다.

‘진상규명’, ‘진실규명’은 우선적 과제로 언급된다. 정부부처 장관부터 국회, 언론 기사, 오피니언 리더에 이르기까지 ‘진실규명’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책임과 직면과 예방을 위한 과제인가, 아니면 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을 강조하고 책임 회피의 이정표를 세우는 언설인가? 여성가족부, 일부 국회의원, 서울시는 피해자를 ‘피해호소인’, ‘피해호소직원’ 이라고 호명하였다가 정정하고 사과한 적이 있는데⁴⁾, 법적 진실규명의 난항과 한계, 현재의 답보 상태를 책임지고 진전시켜야 하는 과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위치로 만들려고 했고, 피해자라는 이름도 삭제한 채 영구히 대기하는 또 다른 자리를 부여하려고 했다.

2. 위력 성폭력에서의 ‘실체 진실’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피해자와 변호인단, 지원단체, 289개 여성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는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은 여러 가지로 형사고발되어 있는 관련 사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수사해 줄 것을 경찰에 요구해 왔다.⁵⁾ 또한 위력 성폭력 사안과 발생구조, 발생 이후 과정과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피해자는 본 고소사건, 2차 피해, 제 3자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죄 고발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그 외 여러 사건들의 전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진술하고 무수히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촉구하고 있는 것과, 기다리는 답신 사이에 ‘위력 성폭력’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규명은 자연적이고 당연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 또한 정치적이고 권력적 작용의 현장을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고 있다.

‘실체적 진실 발견’은 형사법상 원칙과 이념으로 논의된다. 어떤 일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좇는 것

4) 박 전 서울시장의 소속되어 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명칭이 계속 바뀌어왔고, 사과표명은 정치적 판단과 비판적 여론의 형성 상황에 따라 달라져왔다.

‘이해한 “박원순 피해호소인 고통에 깊은 위로, 통절히 사과” (프레시안, 2020.7.15 10:30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71510060185523>

‘이낙연 “피해 고소인과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한겨레 2020.7.15 14:47)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53749.html>

‘김해영 최고, ‘피해 호소인’ 표현 사과…“당의 피해자 보호 부족” (동아일보 2020.7.17 10:48)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717/102017011/1>

이낙연 “피해 여성에 사과…가장 도덕적·유능한 시장 후보 찾겠다” (아주경제, 2020.11.2 11:04)

<https://www.ajunews.com/view/20201102105626779>

‘박원순 피해자, 이낙연에 공개 질의 “도대체 무엇을 사과한다는 뜻인가” (경향신문 2020.10.30 20:5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0302009001

5)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은 경찰에 이제까지의 수사결과를 밝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장 성폭력 수사 결과 발표로 허위사실에 의한 2차 가해 차단해야’ (서남투데이, 2020.12.11 13:13)

<http://seonamtoday.com/news/view.php?idx=11171>

이 중요한 방향이라는 점, 그를 ‘객관적’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치 단일한 실체적 진실이 이미 존재하는 것과 같은 ‘실체진실주의’에 대해서도 권력적 수사, 재판을 통해 유죄추정과 엄벌주의로 몰입될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그에 대항하여 형사법상 민주적 절차주의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⁶⁾ 그러나 ‘실체적 진실’이나 ‘절차주의’ 모두 권력적 재구성, 해석적 실행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쟁투와 정치권의 견인들에서 확인하고 있다.

‘위력성폭력’의 ‘실체진실’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찾아가는 과정은 어때야 할까? 이 역시 위력과 권력이 흐르는 과정임을 인지하는 것은 그 출발이다. 먼저 무엇이 ‘증거’인가는 현행법과 법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사람들, 법적 절차와 그 한계에 의해 증거 형성 여부부터 결정된다. 이 사건에서 압수수색과 포렌식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본 수사부터가 막혀있다. 피해자의 법적 권리는 차단되어 있는 셈이다. 누가 무엇을 ‘진술’ 했는가 역시 그가 어디에 서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누구의 말과 표정을 기억하는지 망각했는지, 침묵과 진술 중에 무엇을 선택 할지는 어디에 설 것인가, 즉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한 입장의 한계를 어떻게 보호하고, 보완할 것인가, 과도하게 대표되는 특정 입장은 어떻게 제재하고 감안할 것인가. 피해자와 제보자, 증언자를 보호할 수 있는가, 권력적 영향과 편견을 제한할 수 있는가? 이 점이 존재해야 위력 성폭력의 ‘실체진실’을 찾을 수 있다.

위력성폭력을 피해자에게만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위력성폭력은 부정되고 감추어지고 있다. 피해자에게만 입증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위력이 작동하고 있는 장면이다. 직장내 성희롱, 차별문제의 제도적 해결에서 ‘입증책임 전환’은 중요한 과제이여 왔는데, 이 역시 쉽게 이루어져 온 것이 아니었고,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요구되고 있는 과제다.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위력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 성차별과 성희롱과 성폭력이 가능했던 조직문화와 매커니즘에 대해서 파악하고 감지하는 것, 누군가를 심기보좌하는 노동이 어떤 방식으로 성별적으로, 착취적으로 배치되고 수행되어 왔는지를 살피는 것, 목인하고 그것을 정당화, 정상화한 사람들의 관습적 행위와 문화를 확인하는 것, ‘구조’를 보는 것이다. 그 속에서 위력 성폭력의 ‘실체 진실’은 찾아질 수 있다.

3. 단체장의 행동, 비서실의 관행, 심기보좌 노동의 구조가

이대로 문제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먼저 대답할 책임을 촉구한다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과 서울시장에 의한 성폭력 두 고발 모두에서 비서였던 노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심기’를 보좌하는 노동이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일해 온 해당 시간 동안에 겪었던 일거수 일투족의 ‘공기’를 설명하라는 상황에 놓인다. “오늘 분위기는 어떠신지...”를 살폈던 것은 피해자들

6) 김혜경(2014), “‘실체적 진실발견’은 형사소송법의 목적인가?’, 형사법연구 제26권 제2호, 192 (32 pages)

만이 아니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재권과 결정권, 무엇보다 '기분'의 영향 아래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공기'처럼 해왔던 일이다.

4년 동안 시장실에서 흐른 기류를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그 매일의 기류는 손끝 발끝들로 구성된 다. 위력 성폭력을 진술하는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하기 위해, 위력의 작동을 '설득'하기 위해 더 많은 디테일한 것을 설명하고 이해시켜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다.

“나는 본 적 없다, 들은 적 없다. 모르겠다, 그러므로 그런 일 없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말은 진실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해당 공간을 책임지고, 구조를 만들고, 개편하고 지시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다.⁷⁾ 위와 같은 주장은 특정한 행위를 보지 못했다는 진술을 넘어선다. 시장실에서 흐른 매일의 기류에 대해 그 '공기'를 마신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그 기류가 어떻게 흐르도록 누가 만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함구하고 망각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그 공기를 마신 적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가? 시장실에 어떤 기류에 흐르게 하고자 했는지 아무런 의지도 없고 책임도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가? 피해자가 겪었던 일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가?

피해자의 실체진실과 책임추구를 위한 모든 진술과 자료제출, 노력에 상응하여 이러한 문제를 가능하게 했던 '구조'를 만들고 그를 통해서 시정을 펼치고 지내왔던 사람들은 먼저 책임있게 답변해야 할 순서에 놓여 있다. 그래야 위력 성폭력의 실체진실과 책임추구에 다가설 수 있다.

피해자의 '자발성' 이전에 비서 업무에 대해 책임있게 답해야 한다

새벽에 출근하여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하루에 두번 빵집과 과일가게에서 장을 보고, 과일을 다섯가지 이상 준비하고, 건강보조식품을 차려서 먹게 하고, 간식을 먹을 시간이 없으면 해당 시간 회의에 참석한 모두에게 간식을 차리고, 포장해 오거나 배달된 음식을 일회용품이 보이지 않게 일일이 그릇에 담고 설겅이하고, 여기저기 놓은 휴지와 치실, 화장실에 튄 이물질들을 치우고, 먹기 싫어하는 개인약을 드시도록 챙기는 것. 벗어놓은 빨래를 집에 보내기 그렇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비서실에서 세탁을 담당하게 되는 것. 이러한 비서의 노동은 공무원의 업무가 맞는지 회의하게 하고, 버티는 사람도 포기하는 사람도 지치고 괴롭게 한다. 피해자는 후임자가 떠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인수인계 자료를 작성했으나, 이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원하고 좋아하던 일이었다는 일방적 주장, 피해자 공격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었다. 먼저, 비서의 업무가 왜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 책임있게 답해야 한다.

7) “박원순 성추행 방조 의혹’ 김주명 전 비서실장 “전보 요청·성추행 들은 적 없다” (한겨레, 2020-08-13 13:4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7645.html
“박원순 전 비서실장 "'피해자절대주의' 대선 안돼" 의견서 (뉴시스, 2020-12-03 20:43:47)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03_0001257732&cid=10201

전보요청 이전에 4년을 근무하고, 재근무 요구마저 받아야 했던 것에 책임있게 답해야 한다

한 사람의 비서가 4년을 근무해야 했던 상황은 시장의 의사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 피해자가 전보 요청을 누구에게 몇 월에 몇 번 했는지 일일이 부인하고 반박하기 위한 분절적 짜깁기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한 근무자가 4년을 일해야 했는지를 먼저 책임있게 답해야 한다. 재선과 3선을 지나며 시장의 행동과 비서실의 관행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또 2020년 2월 다시 시장 비서실로 와 달라는 피해자에 대한 부탁은 왜 일어났는가. 시장의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스템과 순환근무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람을 버티고 갈아넣게 하는 근무기간과 재요청은 지속되었는가.

서울시장의 2선과 3선이 누군가의 정치적인 성취와 성공의 이력이 되고 있다면, 3선 시장을 유지하고 강화시켜 온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책임과 답변이 요구된다.

권력자에 대한 탈성별화된 정당화, 피해자에 대한 성별화된 고착을 책임있게 답해야 한다

시장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던 사람들은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고 임의적으로 탈성별화하면서도 동시에 시장님은 비서의 외모를 따지신다고 말하며, ‘비서들’을 성적 대상화하였다. 피해자의 젠더화된 노동을 그림자화하면서, 그럼으로 피해자의 젠더적 노동의 위치를 고착화했다. 시장이 왜 밤늦게 사진을 보내고 연락하는지, 바쁜 분이 왜 30분-40분을 핸드폰으로 말 걸고 이야기하는지 피해자가 문의하였을 때, 시장의 가까운 보좌진은 “어저께 좀 기분 나쁜 일정이 있었는데”라고 말하며 단체장의 부당한 연락과 행위에 대해 ‘이유’를 찾고 정당화하고, 피해자에게 전가된 위험을 간과하고 ‘위임’했다.

박 전 서울시장의 탈성별화된 존재, 혹은 남성중심성을 초월하고 극복한 존재라는 ‘신화’는 지금도 진보진영 내에서 존재한다. 피해자가 보여주고 질문하고 호소하는 내용들이 이에 의해서 ‘무화’되는 과정에 대한 책임감 있는 답변없이 피해자에게만 위력 성폭력을 입증하라는 요구는 또 다른 무화를 예고할 뿐이다.

- 7/7(화) 피해자 변호인(김재련 변호사)으로부터 사건 지원 요청
- 7/8(수) 피해자를 저녁에 만나기로 했으나 경찰 고소와 동시에 조사가 진행되어 다음 날 만나기로 함
- 7/9(목) 오전 7시 30분, 두 단체에서 피해자와 변호인 첫 면담을 함.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고소장 및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피해자 지원여부 및 방법 등을 각 단체 활동가들과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 7/9(목) 오후 5시경부터 피의자인 박원순 전 시장의 실종,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태 발생. 이후 급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두 단체에서 피해자 지원을 결정하고, 거의 매일 지원단체와 변호인단 회의를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의료적 지원 및 법률지원 등의 통합적 지원을 함

- 7/10 서울시 서울시장 결정
- 7/13 피해자 지원단체 제1차 기자회견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 7/15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위한 1차 회의
- 7/16 서울시 진상규명 조사단 발표에 대한 피해자지원단체 입장 : '그 분'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그분들'의 이익이었다.
- 7/19 공동변호인단 구성(김재련, 이지은, 서혜진, 강윤영)
- 7/22 피해자 지원단체 제2차 기자회견 “그 어떤 편견도 없이, 합리적 절차에 따라”
- 7/28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 제3차 기자회견, “서울시에 인권을, 여성노동자에게 평등을”
- 7/28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 제출 및 위원장 면담
- 7/31 지원단체·변호인단 입장문: 서울시장 사건 업무폰 포렌식 중단에 대한 피해자 측 강력 문제제기

- 8/14 피해자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 8/17 지원단체·변호인단 입장문
“비서실장은 문제해결의 책임자, 모르쇠로 일관하여서도, 입막음을 주도해서도 안 된다.”
- 8/24 지원단체·변호인단 의견서 제출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준강간사건 기소 촉구)
- 8/28 지원단체·변호인단 탄원서 제출 : 북부지방법원 (준향고 기각 결정 촉구)
- 10/7 성폭력특별법 신원누설금지위반 고소장 접수
- 10/13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공문 발송 (청와대, 여성가족부)
- 10/15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제4차 기자회견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 10/30 [공동행동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 성폭력 사건’ 반성 없는 당헌 개정 절차 즉각 중단하라!
- 11/3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활동가 온라인 간담회
- 11/11~23 직장 내 성차별 문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11/23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전문가 온라인 간담회
- 12/17 실제진실과 책임추구를 위한 토론회
- 12/18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해결 촉구하는 천만시민행동 (예정)
- 12/22 직장내 성차별 문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토론회 (예정)

사건 해결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 피해자의 문제제기-> 실체적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
- 이 사건의 경우,
 - 문제제기 자체가 어려운 위력 성폭력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
 - 고소 직후, 고소 사실 유출/피고소인 사망
 - 사법적 진실 규명이 어려워진 상황
-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건해결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 피해 사실에 대한 사회적 인정
-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지위 부여
 - 마땅히 그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이를 통해
 - 피해자 일상 회복
 -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집행
- 이 사건의 경우,
 - '정상적' 절차 밟기에 대한 기대 불가능
 - 사건 해결의 목적 또한 망각/훼손
 - 다른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실현 필요

사건 진행 경과



그러나 이 사건은 어떻게 되었는가

1. 실체적 진실 규명에 대한 적극적인 회피/거부/부정

- 피해자라 부르지 않겠다
- 피해 호소 여성, 고소인, 피해 고소인
- "후레자식"
- 증거물 확보 방해, 확보한 증거물 활용 금지

〈업무폰 포렌식〉
2020. 7. 30. 피고소인 업무폰 포렌식 중단
2020. 8. 28. 지원단체·변호인단 탄원서 제출 :
북부지방법원 (준항고 기각 결정 촉구)
2020. 12. 9. 준항고 기각
2020. 12. 11. 피고소인 업무폰 영장 신청
2020. 12. 14. 법원 영장 기각

〈업무폰 포렌식〉

2020. 7. 30. 피고소인 업무폰 포렌식 중단

2020. 8. 28. 지원단체·변호인단 탄원서 제출 :
북부지방법원 (준항고 기각 결정 촉구)

2020. 12. 9. 준항고 기각

2020. 12. 11. 피고소인 업무폰 영장 신청

2020. 12. 14. 법원 영장 기각

그러나 이 사건은 어떻게 되었는가

2. '위력'의 실제적 등장

- 서울시장 강행
 - 7/9 피소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언급도 없이, 60만 명의 반대 청원이 있었음에도
- '비서실장' 등을 위시한 피고소인 네트워크의 가동; 그들의 정보와 인맥을 동원하여
 - 피해자 부정
 - 피해자 실명, 직장 등 개인신상 유포
 - 피해자 지원단체와 변호인 공격

〈비서실장들〉
2020. 8. 17. 오성규 입장문 “비서실 직원들 누구도 이러한 피해호
소를 전달받은 사례가 있다는 것을 들은 바가 없다” “피해자 중심주
의가 전가의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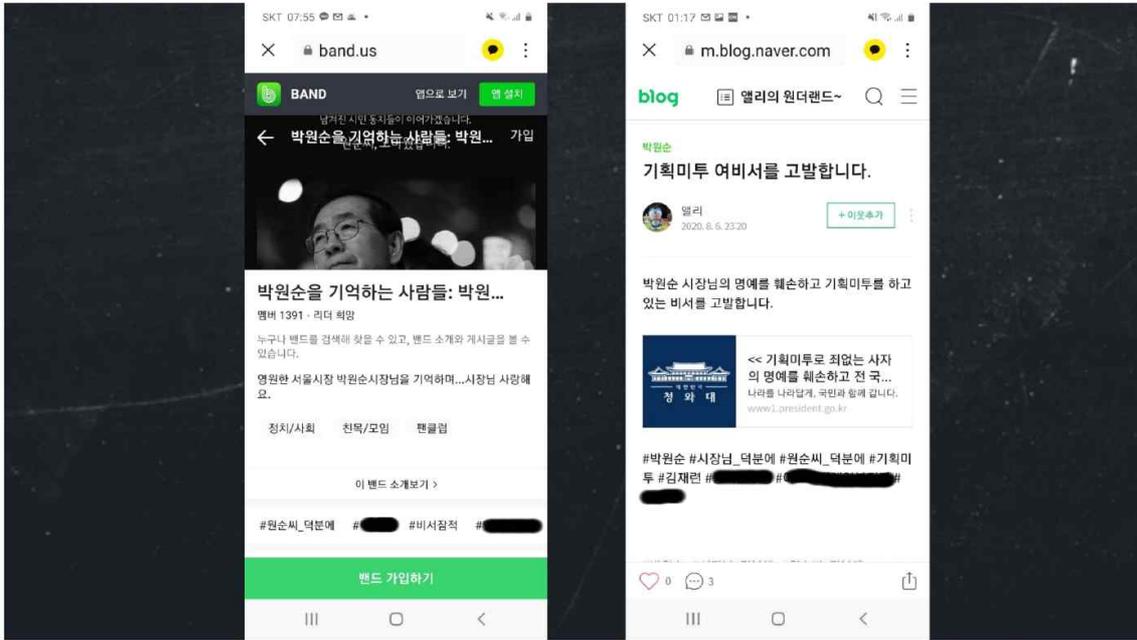
〈비서실장들〉

2020. 8. 17. 오성규 입장문 “비서실 직원들 누구도 이러한 피해호
소를 전달받은 사례가 있다는 것을 들은 바가 없다” “피해자 중심주
의가 전가의 보도”

2020. 9. 30. 김주명 인터뷰 “성추행 호소·전보 요청 사실 아닌데
인정하라는 현실 답답”

2020. 12. 2. 김주명 인권위 의견서 “피해자의 주장이 모두 사실은
아닙니다” “피해자 절대주의를 강요”

2020. 12. 3. 오성규 인권위 의견서 “4월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대
처방식을 서운하게 여긴 고소인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각색하여 진
술하고 주장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믿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어떻게 되었는가

3.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

- 공소권 없음: 수사는? 수사 결과 발표는?
- 수사능력 없음: 공무상 비밀누설
- 실제진실 규명 거부: 포렌식 영상 기각
- 보궐선거는 우리가!
- 더불어민주당, 자당 소속 단체장의 '중대한 잘못'으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규정돼 있는 당헌 96조 2항에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 추가(11/3). 결국 당헌 개정
- 대책은 없으나, 전국민 성인지성 집단학습 기회(11/6)
- 대책의 배경과 원인에 대한 설명 삭제한 서울시 성희롱성폭력근절 대책(12/10)

무엇을 위해, 누구를 대상으로!

- 성폭력의 진실은 은폐되고 위력만 남은 상황
- 문제제기 이후에 쏟아진 사건 부정, 피해자 비난, 지원단체와 변호인 공격은 무엇을 증명하는가
- 이것들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대상으로 자행되고 있는가. 정당한가.

지금, 필요한 것

-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
-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는 것
- 재발방지를 위해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
- 제대로 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박원순 사건의 법적 쟁점 및 과제

온·세상, 따뜻한 세상

변호사 김재련

진행하고 있는 사건

1. 업무상위력추행 등 형사고소
2. 성폭력특례법위반(피해자신원누설금지) 등 형사고소
3. 강제추행방조 등(제3자 고발사건)
4. 공무상비밀누설(제3자 고발사건)
5. 성폭력특례법위반(피해자신원누설금지) 형사고소
6.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요청사건

2

업무상 위력 추행 등 고소사건

◆ 문제

- 7.8. 형사고소/ 7.9. 피의자 사망
- 형사처벌대상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수사중지됨

◆ 형사고소가 갖는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

- 범죄사실에 대한 규명 + 가해자 형사처벌

◆ 범죄사실에 대한 규명이 불가능해졌는가?

-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관련 진실규명은 사망과 무관
- 피의자 사용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으로 사실규명가능

3

피의자 사망은

사실규명의 장벽이 될수없다!

형사처벌의 장벽에 불과하다!

피해자신원누설, 2차가해 고소

- ◆ 박원순 시장 사망당일 '참교육 운운' 등 2차 가해성 인터넷 글 유포, 확산
 - 사이버 수사대 통해 IP추적으로 피의자들이 특정됨.
- ◆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원본이 유출,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포됨
 - 피해자 작성 진술서를 유포한 자에 대한 조사 및 인터넷 유포경위에 대한 조사 완료됨

5

강제추행 방조 등 제3자 고발사건

- ◆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조사에 적극 참여함
 - 박원순 사망으로 원래의 추행 등 사건 추가 수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수사기관 통해 규명 받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참고인 조사 및 관련 증거자료 제출 등 조사에 적극 참여함
- ◆ 피해호소를 들었던 사람들 약 20여명에 대한 광범위한 참고인 조사 완료됨
 - 박원순이 보낸 불편한 문자, 텔레그램 속옷사진 등을 본 사람들에게 대한 조사
 - 피해내용에 대해 호소한 직장상사 등에 대한 조사완료

6

◆ 추행“방조”로 처벌할 수 있나?

- 방조죄 요건 충족여부
- 성고충 들은 인사담당자들이 피해자를 고충상담창구로 연계하지 않고 묵살한 것을 법률적으로 '방조'로 평가할 수 있나?

◆ 전보발령 등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은 책임자들을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있나

- 작위의무 전제될 수 있나

◆ 지속적 전보요구 묵살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나?

◆ 방조죄에 대한 법리적 판단과 별개로 피해자가 호소한 내용에 대해 들은 자, 본 자들의 진술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

7

공무상 비밀누설 등 고발사건

◆ 7.8. 고소장 접수 이후 피소사실 전달 경위관련

- 경찰은 내부 보고 체계에 따라 경찰청, 청와대 보고
- 중앙지검은 7.7. 변호사 김재련과 중앙지검 검사와의 통화시 박원순 시장이 피소될 예정임을 알게 됨

◆ 언론 통해 확인된 내용

- 7.8. 오후 3시경 서울시 젠더특보 임순영이 박원순에게 문의
- 7.8. 오후 11시경 서울시에서 박원순 및 보좌진, 임순영 등이 대책회의

◆ 쟁점

- 내부 보고 근거규정과 성폭력특례법 제24조 1항 충돌문제

8

◆ 성폭력특례법 제 24조 제 1항

-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특례법 제50조)

◆ 정부조직법 제 11조 제1항

-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별도의 내부보고 근거규정은 발견되지 않음.

9

성폭력특례법위반(피해자 신원누설)

◆ 2020.8월경부터 네이버 밴드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 회원명 1,391명”, 네이버 블로그 “엘리의 윈더랜드” 메인화면에 피해자 실명, 소속 근무기관명이 해시태그 형태로 기재됨

◆ 2020.10.6. 해당 사실 인지 후 10.7.자로 형사고소 및 구속수사촉구서제출, 1인시위 등을 진행함

◆ 쟁점

- 범죄에 해당함은 명백

- 피해자 실명, 직장명 공개로 피해자의 일터복귀, 일상복귀를 완전 봉쇄한 행위에 대해 엄중구속수사 필요

10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요청

피해자는, 서울특별시 박원순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의 피해를 당한 바, 망 박원순에 대한 법적 처벌을 구하기 위해 2020. 7. 8. 박원순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박원순이 고소사실을 모종의 경로로 확인한 직후 자살한 결과 피해자의 고소사건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될 것이 자명한 바,

박원순의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성적 괴롭힘 등에 대한 사실조사 및 피해자의 지속적인 인사고충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해 피조사자를 상대로 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등을 청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0조 3항에 근거하여 직권조사발동을 요청함.

11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요구 8항목

- ①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성차별적 직원채용 및 성차별적 업무강요
- ② 박원순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 성적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정도
- ③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직장내 성희롱 및 성범죄 피해에 관한 방조
- ④ 직장내 성폭력, 성희롱 피해에 대한 미흡한 피해구제절차
- ⑤ 7. 8.자 고소사실이 박원순에게 누설된 경위에 대한 조사
- ⑥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이행여부
- ⑦ 선출직공무원 성폭력에 대한 징계조치 등 견제장치 마련 요청
- ⑧ 직장내 성폭력예방교육의무의 이행 여부

12

사회적 규명 과제

◆ 용어의 퇴행

- 피해호소인/ 피해자 절대주의

◆ 공과가 있는 가해자 지지세력에 의한 2차가해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상의 2차피해 방지 위한 적극적 조치 규정 보완필요

◆ 모호한 사과의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지적

◆ 피소 이후 사망시 수사종단, 이대로 좋은가?

13



14

어떤 죽음은

가해였다, 최종적인 형태의 가해!

정세랑 작가 소설 "시선으로부터" 내용에서 발췌 인용

15

참으려고 했는데, 너무 선을 넘으니까 무서웠어요....

책임지지도 못할 죄를 지고 왜 죽냐구요....

차라리 그 때 내가 죽어 버릴 걸 그랬어요....

왜 나를 살인자를 만드냐구요....

사과도 안하고...이렇게 죽으면 어떡해요....

용서할 기회도 주지 않고....

사과하면 용서해 주고 싶었는데....

제가 더 참을 걸 그랬나봐요....

성평등 운동 속에서 사건을 생각한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2020년은 한국인들에게 코로나19의 시간으로 기억되겠지만, 서울의 시민과 여성들, 성평등 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에게는 서울시장의 유고(有故)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준 사건이다. 아직 경찰 등 책임 있는 정부기관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사건의 전말(顛末)을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동안 여러 차례 제시된 피해자 측의 문제제기만으로도 몇 가지 확인이 가능한 점이 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평등 운동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사건은 고(故) 박원순 시장이 개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명백한 위력 성폭력으로서 의심조차 받지 않을 사건’이라고 피해자 측 여성단체 대표가 이야기한 바 있다. 이 진술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오랫동안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을 수행해 온 여성단체의 사명감과 전문성을 인정한다면, 1차적으로 권력형 성범죄로서 의심해 볼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는 매우 분명하다는 것이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박원순 시장이 가해자로 지목되어 있다는 사실이 사건의 규명과 대응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이 한국 여성운동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고락을 함께 해 온 인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박 전 시장이 세상을 떠난 후 5개월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몇몇 분들이 각 자의 입장에서 고인에 대한 기억과 단상들을 쏟아냈다.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언설들이었지만, 대부분 주관적인 감상이나 사적 편린들이었을 뿐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하지 않은 것들이었다.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아직도 베일에 싸여 있는 이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나 경찰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 나눌 수 있는 몇 가지 고민을 정리해 본다.

첫째, 서울시장의 위력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문제는 가해자가 누구든 사건의 규명에서부터 최종 판단까지 동일한 절차에 의해 다뤄져야 할 것이다. 가해자가 어떤 인물이든, 성평등 운동과 맺어온 관계가 어떤 것이든, 인물의 개별성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솔직하게 결과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 가해자가 많은 사회적 업적을 남겼다거나 정치적으로 유망한 사람이라는 이유가 위력 성폭력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둘째, 박 전 시장이 생전에 남긴 업적에 대한 평가와 이번 사건에 대한 판단은 분리되어야 한다. 박 전 시장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현장에 있었다.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후에는 성장과 개발 중심의 도시

발전전략에서 탈피해 사람을 존중하는 마을 단위 풀뿌리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9년 여의 시간 동안 서울은 조용한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그의 이런 치적이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功)’과 ‘과(過)’는 각각 분리되어 평가되어야 한다. 먼 훗날 긴 시간이 흐른 후 사건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공과 과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가 가해자로 의심되는 행위와 사건에 대한 진실한 규명이 필요한 시간이다.

셋째, 박 전 시장 사건이 어떻게 귀결되든, 성평등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서울의 여성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성평등 운동에서 박 전 시장이 거둔 성과는 ‘젠더거버넌스’의 운영이다. 2000년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기반을 구축한 젠더거버넌스, 즉 성평등사회의 구현을 목적으로 시정(市政) 전반에 성평등 비전과 성인지적 관점이 통합될 수 있도록 민과 관, 전문가가 협력하는 협치체계를 보수 정부 시기 크게 약화되었다.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민주적 여성단체들이 배제되고 여성은 정책의 주체에서 수혜자로 대상화되었다. 박시장의 당선을 계기로 서울의 여성들은 젠더거버넌스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생활정치와 제도정치를 연결시킴으로써 사적인 문제라고 여겨졌던 것들을 국가와 지방정치의 책임으로 설정해 갔다. 또한 지역의 여성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겪는 문제들을 여성운동과 지역정책의 주요 의제들로 만들어가는 풀뿌리 여성운동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다. 시청 안에서는 성평등위원회를 조직해 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직접 참여하거나 자문을 수행했다.

그 결과 2013년에는 서울에서 젠더거버넌스 운동이 열매를 맺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풀뿌리여성단체의 협력으로 시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모니터링을 실시한 것이다. 2017년부터는 풀뿌리여성네트워크 바람의 주도로 25개 자치구의 여성들이 직접 ‘시민이 만드는 성평등 정책’ 사업을 수행해 왔다. 2020년 12월 현재 서울시의 여성정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목할 만한 것들이 적지 않다. 이런 성과는 이렇다 할 만한 소득도, 지위도, 명예도 없이, 자신과 가족, 이웃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 수많은 여성 시민들의 땀과 눈물이 얻은 결과다. 박 전 시장은 이런 여성들의 소망과 기대가 무엇인지 알았고 시장의 권한을 활용해 뒷받침해 갔던 조력자였다.

따라서 서울의 여성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이 사건에 대한 처리는 더욱 중요하다. 가장 안전하리라고 기대했던 시정의 한 복판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중의 신뢰를 한 몸에 받던 인물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사욕을 채우려 했을 때 발생한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가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쌓아온 성폭력에 대한 대응 수준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것을 더 개선해 가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박 시장 사후 전개된 일련의 상황은 더욱 우려스럽게 보인다. 장례의 형식과 절차, ‘피해자’ 명칭의 사용 거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공격들.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정당의 행태들. 정치인과 공직자 중 누구도 사건의 진실을 말하지 않고, 시장이 몸담았던 정당이나 시장을 보필했던 관료들 중 누구도 진정한 사과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지금. 바로 이 시간이 더 문제적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입을 여는 순간 ‘진영’ 논리에 갇히고 공격당하는 지금이 더 문제적

일 수 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은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파적 목적을 넘어선다.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고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고 가해자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피해자는 어떤 상해를 입었는지 알아가는 노력은 누구를 공격하거나 무너뜨리려는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노동자가 일이 아닌 성적 서비스를 요구받고 거절할 수 없을 때,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견디기 어려운 모욕을 감내해야 할 때, 그것에 대해 말하고 행위를 중단시키고 행위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일일 뿐이다. 이런 절차를 통해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사건을 예방하는 일일 뿐이다. 조직의 위계 서열에서 권력을 가진 상급자가 하급자를 성적으로 괴롭히지 않도록 규범을 세우고 경종을 울리는 일일 뿐이다. 어떤 조직도 어떤 집단도 어떤 사회도 어떤 국가도 이런 기본적인 절차와 실천이 없이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살아갈 수 없다. 서울시장 사건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 사건을 원칙과 절차에 맞게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우리사회 성평등의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엄격하게 조사하고 명확하게 밝히고 진실하게 대응책을 구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

‘성폭력 부정주의’와 한국정치 구조¹⁾

권명아 (동아대 젠더어펙트연구소)

1. 2차 가해 범주를 넘어서는 부인 정치(denial politics): 성폭력 부정주의

본 발표자는 충남, 부산, 서울 등 최근 광역단체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성폭력을 부정하거나 피해자를 공격하는 일은 한국 사회에 오래 반복되었다. 그러나 안희정 사건은 기존의 성폭력 2차 피해 방식을 초과하는 기이한 폭력을 집단적으로 구축하였고 이는 이후 사건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부산성폭력 상담소에서 주관한 「2019년도 2차 피해 사례 분석 및 법정 내 2차 가해 근절을 위한 제언」에는 2차 가해 집단, 가해 유형과 피해 사례가 자세하게 분석되어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성폭력 2차 피해 가해자는 가해자 변호사(199/50), 학내 사내 기관 및 주변인(49), 가해자 가족(25) 등이 주를 이룬다.²⁾ 안희정 사건은 기존의 성폭력 2차 피해 사례와는 비교가 안 되는 초유의 사례로 논의된다. 무엇보다 성폭력을 부정하는 2차 피해 가해자 집단과 동원 네트워크가 기존의 2차 피해 가해 방식의 규모를 초과한다. 정파 조직을 중심으로 시민사회, 정부, 언론, 학계, 법조계, 온라인 네트워크 등 사상 초유의 조직적 네트워크를 통해 작동하는 전무후무한 거대한 2차 가해 집단이 출현했다. 또 기존의 정파 조직을 기반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를 지지자 온라인 네트워크, 다양한 정동-기술적 네트워크를 동원하는 완전히 새로운 폭력이 출현했다.

2. 조직화된 성폭력 부정주의가 가능해진 기반: 운동권 정파주의, 광역단체(공공기관) 조직의 무책임주의, 이중노동시장의 비가시화

①민주화 세대가 청년기 운동권 문화에서 만들었던 정파주의와 조직보위는 이데올로기이자 특정한 정

1) 이 발표문은 2020년 필자가 여러 자리에서 연속 발표한 발표문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바탕으로 삼은 발표문은 아래와 같다.

권명아, 「성폭력 부정주의의 정동적 힘과 대안적 정동 생성의 ‘쓰기」, 문화연구학회, 2020년 8월 발표문

권명아, 「성폭력 부정주의와 부인의 수사학 연구」, 2020 11월 동아대 젠더·어펙트 연구소 국내학술대회 발표문

권명아, 「K적인 것의 기원과 K차별: ‘사회적 합의’라는 문턱에서 차별 통념 변화를 위하여」, 2020년 12월 숙명대학교 학술대회 발표문(발표 예정)

2) 「2019년도 2차 피해 사례 분석 및 법정 내 2차 가해 근절을 위한 제언」, 부산성폭력상담소 토론회 자료집, 2019, 14~15쪽.

동 체계로 오늘날 이들 세대 집단의 지배적 정동 구조의 주요 부분을 이룬다. 이러한 정동 체계가 정당 조직과 광역단체장 조직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국가기구의 ‘민주화’ 과정이기도 했으나, 국가 조직과 공공 영역이 정파적으로 재구성되는 무한 연쇄로 이어졌다. 특히 이런 정파 조직이 지방정부로 이어지면서 광역단체 조직은 ‘조직보위’로 뭉친 내부, 포함인 배제 집단, 갈등하는 적대적 공존자인 기존 행정집행전문가(기존 공무원 집단)로 분열적으로 구성된다. 이런 조직 구도가 성폭력의 구조적 원천이자, 사상 유래가 없는 ‘국가조직 주도형’ 2차 가해가 생산되는 구조적 원천이기도 하다. 또한 이런 분열적 구조로 인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책임을 기관과 집단 별로 서로에게 전가하는 무책임주의가 발생한다. 광역단체장 성폭력 사건의 여러 사례에서 단체장에 대한 관리 감독 자체가 사각지대가 되는 점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

②. ①의 조직 구도는 고위 직급과 정규직, 남성으로 이뤄진 내부자 집단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자원봉사로 이뤄진 주로 청년과 여성에게 할당된 외부자 집단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런 조직 구조는 이중노동 시장이론에서 논의하는 이중 구조의 특성을 고스란히 반복한다. 즉 이런 조직 구조는 지방정부와 정당 조직과 같은 공공 영역에서 이중 노동 시장 구조가 어떻게 특수한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문제를 만드는 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일련의 광역단체장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이 연구는 이 사건들이 특정 개인의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만이 아니라, ‘민주화’ 세대 정치 집단이 구축한 정치 조직의 구조의 산물이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운동권의 정파주의와 공공기관을 잠식한 노동의 이중 구조화가 결합한 특수한 조직 구조의 폭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정규직 전환을 포함한)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이자 정책이었다. 그러나 막상 문재인 정부의 주요 기구들은 비정규직 착취의 매우 특수하고도 문제적인 방식을 반복하고 정당화하고 있다.

③. ①과 ②의 검토를 통해 우리는 광역단체장 성폭력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에 대한 분열적이고 이중적인 태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문재인 정부는 젠더와 계급, 성평등과 노동을 서로 상이한 행위 주체와 집단에게 할당하여 분할 통치하는 방식을 지속하고 있다. 성폭력 부정주의는 이런 정치 공학에 의해 강화되고 때로는 동원된다.

3. 맞불전략과 정파투쟁의 정동 정치

광역단체장 위력 성폭력 사건을 기점으로 형성된 성폭력부정주의는 주로 한국 사회 기득권층이 된 집단에 의해 생산되고 재생산된다. 이 과정은 한국 사회에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지배권력과 지배 권력에 의한 폭력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생생한 현장이라 할만하다. 정치권은 모든 문제를 현재의 집권 여당과 반대세력(과거 집권 세력)의 대립으로 환원시키고, 새로운 지배는 세대 패러다임으로 환원되기도 한다. 현재 586세대가 경제적으로도 한국 사회 상층부와 기득권 세력이 되었고, 윤리적으로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은 누차 강조되었다. 성폭력 부정주의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현재 자신의 지위나 직업 등과 상관없이 스스로 ‘운동하는 주체’로 상정한다는 점이다. 아니 어떤 점에서 광

역단체장 성폭력 사건과 미투 운동은 투쟁의 장을 잃어버린 586세대들이 ‘운동판’으로 되돌아 간 것 같은 정동적 현실성을 구성했다.

특히 과거의 운동권 네트워크를 통해 여전히 강고하게 결속을 맺고 있는 이들이 페미니즘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나 판단은 기껏해야 2000년대 ‘신사회운동 논쟁’ 방식의 이해를 반복한다. 2000년대 신사회운동에 대한 논쟁 패러다임 속에서 노동운동을 해방의 정치이자 민중 운동으로 한국 사회의 모순의 구체성을 담지한 것으로 설정하는 반면 신사회운동(페미니즘, 소수자 정치 등)은 서구의 포스트 모던 현실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고, 해방의 정치의 측면도 있으나 삶의 정치에 가깝고, 현실적 구체성 보다는 “중간계급의 극단적 이상주의”로 전략할 가능성이 다분한 흐름으로 치부했다. 운동권 네트워크 속 여성 지식인들 중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경우도 대부분 이러한 운동권의 2000년대적 인식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한다. 운동권 네트워크 내에 페미니즘을 대변하는 여성이 거의 없다는 점도 이런 이유다. 이런 여러 요인들로 인해 이른바 집권 여당을 지지하는 ‘운동권 정파’에 의한 성폭력 부정주의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성폭력 부정주의가 운동권 정파 투쟁의 하나로 지속되면서,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는 식의 차별 선동 역시 강해질 전망이다. 이런 경향이 지속되면 이들은 한국 사회에 전례가 없는, 차별을 ‘진보를 위한 투쟁’이자 적에 대한 정당한 공격과 자기 방어로 합리화하는 전무후무한 지배 이데올로기를 구성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양상은 성폭력부정주의 세력이 매우 익숙한 맞불 전략을 전유하는 데서도 징후적으로 드러난다. 맞불 전략은 윤리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진보 세력’에 대응할 여지가 없던 기존 우파 정치 세력이 진보 세력의 아젠다, 비판 논점과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사용해온 방식이다. 기존 보수 세력은 현 집권 여당의 정책에 대해 맞불전략으로 무력화한다면, 현 집권 여당은 새로운 정치 세력의 비판과 문제제기를 맞불전략으로 무력화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극단적인 진영 대립으로 분열되고 있다는 점을 이런 맥락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운동권 시절에서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민주화 세대는 ‘헌신’과 ‘열정’, 자부심, 주인의식 등이 아로 새겨진 민주화 세대 고유의 정동 체계를 구성했다. 이러한 정동 체계에는 민주주의의 적을 향한 맹렬하고도, 대타적인 우월감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다. 적을 향한 우월감은 정파주의적인 조직 보위의 신념과 쌍을 이룬다. ‘조국 대전’을 징후로 하여 “민주주의의 적”은 “비판세력”으로 확대되었고, 성폭력을 부정하는 일도 비판세력에 대한 조직보위의 정동적 힘을 강화하고 쇄신하는 연쇄 속에서 발생한다. 민주주의의 적을 향한 우월감과 신념에 찬 조직 사랑의 열정은, 비정규직 성폭력 피해자 여성과 지지단체, 페미니즘, 청년, 비정규직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집단적 부인의 정치를 추동하는 정동으로 변용되었다. 이런 식의 정파적인 조직보위의 정동 체계는 항상 자기 정파에 유리한 결과를 생산하지 않는다. ‘조국대전’ 당시 서초동 집회는 검찰지시 세력의 맞불집회 전략에 맞물려, 오히려 지지기반을 완전히 상실했던 보수 정당을 회생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런 점에서 ‘극단적인 진영대립’을 조직하고 재생산하고 정당화하는 행위 주체는 바로 이러한 민주화 세대의 정파적 정동 체계이다. 이들은 공공기관을 정파적으로 장악하고, 노동 시장에서 높은 임금과 보호 체계, 좋은 승진 조건을 지닌 1차 노동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화 세대’인지 모르지만, 더 이상 민주적인 세

대는 아니다. 게다가 이들 세대의 정파적 정동 체계는 국가 기구와 시민사회 전반에서의 공공성의 부재와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화를 비가시화하고, 이를 '정파'의 문제로 환원하고 정당화한다. 민주화 세대는 세계를 '적과 우리'로 분할된 적대 진영으로 느낀다. 진심으로 그렇게 느낀다는 점에서 그들은 완벽하게 정파적으로 배타적인 세계를 정동적 현실(affective reality)로 살고 있는 것이다. 헌신과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한 이 정파-친구로 구성된 정동적 현실을 살아가는 민주화 세대에게 이들을 기득권이자 성폭력 가해 집단이라고 '공격'하는 이들의 존재는 터무니없이 비현실적이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비정규직, 불안정 고용, 노예노동의 노동 현실과 그 연장에서 일상의 공포로 자리 잡은 성폭력의 위험성은 그야말로 가상의 공포이기 때문이다.

모든 게 적과 내 편으로 나뉜, 그토록 정파적인 세계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정동적 현실이다. 그리고 그 정동적 현실에서 공적 합리성, 공공성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다. 과거의 그 언젠가 민주화를 추동하는 정동이었던 정파적 정동은 지금 이곳에서 공적 합리성, 공공성, 시민성, 평등과 같은 민주적인 모든 것을 잠식하는 정동이 되고 있다. 민주-화 세대의 민주-화는 국가 기구에 대한 정파적 지배가 되었고 공공 영역은 모두의 것이 아닌 정파의 몫으로 배타적으로 할당되고 있다. 나아가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시민단체, 정부를 견제할 민간 기구, 인권 단체와 언론, 지식계, 법조계 등이 앞서 논한 국가 기구에 적극 포섭된 결과, 이들 정파적 지배 집단의 권력을 감시할 공적 기구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 노동자의 언어를 복원하기

이라영 (작가)

1. 노동자의 언어를 정부의 언어로 오역하기

‘여성 노동자’는 어떤 존재인가. 노동자는 ‘여성’인가. 여성은 ‘노동자’인가. 이 ‘여성노동자’의 정체는 과연 신뢰받는 화자인가. 노동은 아름다움을 배척한다. 통념적인 여성성과 노동은 대립하는 관계에 놓인다.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 노동자는 애초에 품위와 명예가 없는 존재다. 그 여성의 노동이 성역할에서 확장된 노동이라면 이들의 노동은 노동으로 여겨지는가. 급식 노동자가 그냥 ‘밥하는 아줌마’라면, 비서는 ‘사무실의 꽃’이라 부른다. 모두 노동자 정체성을 부정당하는 노동자다. 노동의 세계에서 여성의 자리는 밥과 유희 사이에 걸쳐 있다.

잇따라 터져 나온 비서 성폭력 사건을 보며 ‘비서’라는 노동자의 위치와 그들의 언어를 생각했다. 비서의 언어는 어떻게 해석되는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재현되는 비서는 모델 같은 외모를 가진 여성이다. 때로 이 비서는 자신의 상사와 내연 관계를 맺는다. 비서는 성폭력으로 노동권을 침해 받는 노동자가 아니라 상사에게 꼬리치는 ‘꽃뱀’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처럼 그려진다.

남성 고위직과 여성 비서라는 구도는 거의 모든 조직에서 보편적으로 자리 잡았다. 폭로와 고소 등을 통해 ‘이제서야 비서를 향한 각종 성폭력이 알려졌을 뿐이다. 우선 2018년 수행비서 김지은의 폭로를 통해 알려진 안희정 성폭력 사건부터 2020년 오거돈 부산시장의 직원 성추행 사건, 지난 7월 박원순 성폭력 피소 사건에 이르기까지, 각각 다른 사건들이지만 직장 내 여성 노동자의 위치를 반복적으로 상기시킨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이 알려졌을 때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여론에 영향을 미치던 중요한 목소리 중 하나는 부인 민주원의 발언들이었다. 수행비서였던 김지은과 안희정의 부인 민주원의 주장이 서로 일치되지 않았을 때 아내의 위치에 있는 여성의 말에 무게가 실리곤 했다. 중년의 아내와 젊은 여성 비서라는 구도 속에서 여성 노동자의 언어는 지속적으로 정부情婦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민주원은 “안희정과 김지은은 연애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스위스 출장에서 “슬립만 입고 맨발로” 호텔방으로 왔다고 주장했다. 이때 호텔, 슬립 등의 언어를 낱아채 언론에서 제목으로 활용한다. 민주원은 진정한 피해자는 아내인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제 명예를 되찾기 위해”라고 했다.

성폭력과 불륜 중에서 왜 민주원은 불륜이 자신의 명예를 되찾는 길이라 생각했을까. 성폭력은 안희

정의 일방적 비서 폭행이지만 불륜은 ‘안희정의 아내’를 확실한 피해자로 만들어준다. ‘본처’의 명예와 ‘정부’의 명예 사이에서 대부분의 기부장제 구성원은 본처의 명예에 손을 들어준다. 노동자에 대한 성적 착취가 아니라 큰일하는 남자의 앞길을 막는 요부, 본처의 명예에 먹칠하는 정부라는 틀에서 ‘비서 김지은’은 신뢰받지 못하는 화자가 된다. 김지은의 “넹”은 줄지에 ‘귀여운 척’ 혹은 ‘성관계 동의’ 등의 구실로 불려나왔다.

여기서 더 나아가, 노동자가 아니라 정부이기 때문에 김지은은 성폭력으로 직장을 잃은 실직자가 아니라 불륜을 그만둬야 하는 비도덕적인 여자로 읽힌다. 그렇기에 그의 위태로운 일자리에 관심이 가지 않고 ‘대선 주자를 망하게 하고, 상사의 아내에게 상처준 나쁜년’이라는 틀에 갇힌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에서 ‘아내의 말’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교란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남성 상사에 의해 성폭력이 벌어졌을 때 가해 남성의 부인을 소환함으로써 이처럼 두 여성이 대치하게 만든다.

2018년에 하태경 의원은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 논란과 관련해 “남성 의원이 여성 비서와 (출장을) 가는 게 괜찮은 거라고 하면 이걸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나”라며 “저는 와이프가 무서워서 가라고 해도 못 간다”고 했다. 출장을 동행한 비서의 성별이 여성이기에 이 출장은 업무가 아닌 듯 묻고 간다.

김지은의 동료들 중에서 안희정을 옹호하는 이들도 김지은의 ‘업무’를 정부의 행동으로 왜곡했다. 예를 들어 김지은이 직접 안희정이 머물 호텔을 예약했다며 성폭력이 아니라는 쪽에 힘을 실었다. 상사의 출장 시 호텔 예약하기는 비서의 업무임에도 ‘여성과 호텔’을 연결시켜 마치 불륜의 장소를 직접 선택한 사람인 양 만든다. 이처럼 여성 비서의 업무는 지속적으로 연인의 행동으로 오역된다. 출장 시 숙박 장소인 호텔은 밀회의 장소로, 출장은 연인간의 여행으로 뒤바뀐다.

박원순 비서실 직원이었으며 ‘4월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6층 안방마님’이라 불렀다. 비서 노동자를 바라보는 동료 남성의 시선을 알 수 있다. 비서들이 겪는 성적 침탈이 상사에게 총애받는 것으로 읽힌다. 비서 노동자가 호소하는 괴로움을 ‘여성이 성적으로 남성 상사에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상황’으로 뒤바꾼다.

2. 여성 노동자의 말하기

박원순 성폭력 피소 후 이 사건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역시 비서의 언어를 검증하려고 했다. 예를 들어 비서가 쓴 ‘인수인계서’가 비서의 말을 믿지 못하는 증거인 양 제시되었다. 인수인계서에는 노동자의 업무가 담겨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비서의 감정과 성폭력 여부를 읽을 수 있을까. 인수인계서에 적힌 비서의 ‘자부심’ 언급은 마치 ‘성폭력은 없었다’라는 정황 증거처럼 읽혔다. 많은 언론은 경찰이 인수인계서를 확보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자부심’이라는 언어를 제목에 붙이거나 소제목을 통해 강조했다.

마침 <김지은입니다>에는 김지은이 수행비서 업무를 시작하면서 인수인계를 받을 때 상황도 자세히 언급된다. 제일 처음 받은 교육은 안희정의 구두를 어떻게 놓는지이다. 인수인계에서 김지은은 안희정의 식성과 커피 안에 넣는 각설탕 수까지 전달받는다. 그리고 선임자는 김지은에게 ‘여자’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하지 말 것을 재차 강조한다. ‘여자’와 관련해서는 어떤 곳에도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신신당부한다. 인수인계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난다.

“지금까지의 인수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사님 기분’이다, 여기에 별표 두개를 그려라, 인수인계 사항들은 모두 지사님 기분을 맞춰드리기 위한 것이다.”¹⁾

이처럼 비서 간의 인수인계서는 ‘비서의 기분’을 전달하는 문서가 아니다. 상사의 기분을 보좌하는 비서의 태도 목록을 전달하는 문서다. 그렇기에 인수인계 문서는 비서의 주장을 믿지 않을 근거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비서의 노동이 철저하게 상사의 ‘심기 보좌’였다는 주장을 믿을 이유가 된다.

박원순 성폭력 사건에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점은 비서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다. 비서의 역할이 실은 여성의 성역할이고, 더는 이러한 ‘관행’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는 점이다. 박원순 사건 피해자는 비서 채용 과정부터 문제 삼았다. 그가 말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이야기들이 전해졌다. 피소된 가해자의 사망으로 법적인 해결책은 난관에 봉착했으나 비서라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복원하는 일은 이 사건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피해자는 박원순이 샤워를 하면 속옷까지 챙겨야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속옷만 입은 사진을 텔레그램을 통해 비서에게 은밀하게 전송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공식화된 ‘속옷 챙기기’ 업무가 훨씬 더 문제적이다.

이 폭력은 단지 여성 비서와 남성 상사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다. 여성 비서를 둘러싼 남성 중심 공식사회가 관행적으로 벌인 일이다. 김지은도 안희정 외에 다른 남성 직원의 성폭력을 고발했다. 2018년 공개된 부산 오거돈 전 시장이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들을 주변에 앉혔던 사진은 바로 이러한 구조를 드러내는 시각적 증언이다. 여성 노동자라는 존재는 마치 공적 허가를 받은 성적 착취 대상으로 여긴다.

‘사무실의 꽃’으로 여기며 비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환경에서 비서의 업무를 꼼꼼하게 밝힌 <김지은입니다>는 중요한 자료다. <김지은입니다>는 몇몇 도서관에서 신청을 거부하기도 했다. 남성 중심의 권력 구도를 고발하는 여성 노동자의 언어는 사회에서 몹시 불편하게 여겨진다. <김지은입니다>에서 ‘조배죽’이라는 언어를 소개한다. 안희정과 그의 보좌진들은 술자리에서 건배를 할 때마다 ‘조직을 배신하면 죽는다’는 뜻의 ‘조배죽’을 외쳤다고 한다. 별정직 공무원은 도지사의 말 한 마디면 해고될 수 있다.

일제시대 임금 노동에 참여한 여성 노동자들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에는 성폭력이 빠지지 않는다. 1930년 평양에서 파업하던 여성 노동자들은 노동 시간 조정과 양질의 식사,

1) 김지은, <김지은입니다>, 봄알람, 90쪽

그리고 “남공의 농담을 금하라”라고 요구했다. 관리직 간부만이 아니라 동료 ‘남공’도 여성 노동자들을 성적으로 희롱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 노동문학인 강경애의 <인간문제>에서 오늘날 한 노동자의 기록인 <김지은입니다>에 이르기까지, 여성 노동에 대한 소설이든 기록이든 성착취는 공통적으로 담겨 있다. 공장에서 일하는 육체 노동자나 고위직 남성을 수행하는 비서 노동자나 모두들 성적 괴롭힘을 겪는다. <인간문제>의 주인공 선비는 성착취와 노동착취에 대항하고 여성 노동자들과 연대하려 하지만 병으로 죽는다. 90년대에 여성 노동자를 의미 있게 재현한 신경숙의 <외딴방>은 노동계층이었던 작가의 목소리를 통해 죽은 여성 노동자를 애도한다.

이처럼 여성노동자에 대한 문학적 개입이 여성노동자의 목소리에 정치적 힘을 주었다면, 2020년 <김지은입니다>는 여성노동자가 직접 현재진행형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고발이다. 김지은은 자기 소개를 “여성노동자로서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시작하며 다시 일상을 회복하길 원한다. 별정직이었던 김지은은 일을 그만두고 본인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뒤 성폭력을 폭로해야만 했다. 박원순 피해자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직장을 상실하지 않은 채 목소리 내는 노동자이다.

가부장의 언어는 여성으로서, 노동자로서 여성 노동자의 발화되는 언어를 꾸준히 왜곡해왔다. 여성 노동자의 언어는 여성 노동의 자리를 보여준다. 여성 노동자의 증언을 통해 여성이 ‘노동자의 언어’를 획득해야 하는 이유다.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였던 윤지오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성폭력과 관련된 여성 노동자의 언어는 여성이며 노동자라는 이중의 억압 속에서 묵살당해왔다. 지역단체장 비서 성폭력 사건은 최소한 여성 노동자의 언어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미디어를 통해 본 위력 성폭력 사건의 문제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최근 모 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한 국민이 뽑은 2020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순위가 발표되었다. 1위는 코로나19, 2위는 ‘박원순’이었다. 3위가 부동산 가격급등, 5위가 N번방 성착취사건이다. 검찰 개혁을 앞세운 추미애·윤석열 갈등은 12위로 나타났다. 7월9일 그가 사망한 지 5개월이 지났어도 ‘박원순’은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2020년 7월8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실종, 그리고 7월9일 사망보도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더욱이 실종 전날 위력에 의한 성폭력사건의 가해자로 경찰 고소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시민들은 그의 사망원인을 알게 되었고, 분노와 깊은 허탈감이 몰려왔다.

언론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도했을까. 가해자인 박원순은 10년 동안 서울시 행정의 수장이었고, 유력 대선주자였다. 그러나 성폭력사건과 함께 죽음으로 공소권이 없어진 사건에 대해 언론은 어떻게 보도해야 했을까. 수사기관이 밝히지 못하는 실체적 진실을 시민들은 언론을 통해 알고 싶어 했으며,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7월22일 2차 기자회견 이후 박원순 성폭력 사건을 음모론으로 규정하고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유튜버, 페이스북, 인터넷 언론이 준동하기 시작한다. 오히려 기성언론은 보도량이 현격히 줄었고, 페이스북에 나오는 글을 기사화 시키는 정도였다. 그리고 8월6일 서울신문은 광병찬 칼럼 <광기, 미투를 ‘조롱’에 가두고 있다>를 통해 그들의 주장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이 보도의 후폭풍은 만만치 않았다. 사건을 음모로 뒤덮고 진실인양 호도하려는 시도에 대해 언론계는(특히 젊은 기자들) 분노했다. 서울신문은 광병찬을 논설고문에서 사의토록 했다.

7월8일부터 12월 16일까지를 유사언론을 포함한 언론보도를 보면 크게 5번의 변곡점이 있었다.

1. 사건에 대한 보도,(7월 9일 ~12일)

사건의 원인, 서울시의 대책회의, 사망자의 당일 행적, 유서 등
빈소에서 이해찬 대표가 기자에게 한 후례자식 발언
류호정, 장혜영 의원의 장례식장 불참에 대한 보도와 논쟁

2. 서울시민장으로 진행된 장례식과 1차 기자회견 전후 (7월 13일 ~ 7월 21일)

7월13일 이해찬 대표의 사과 발언 - 피해호소인,

서울시의 진상조사 필요성

7월17일 민주당 피해호소인에서 피해자로 호칭 통일

7월21일 <오마이뉴스> 2,30대와 4,50대 박원순 사건 인식차이의 원인은?

3. 2차 기자회견과 성폭력 사건 부정 (7월 22일 ~)

7월 23일 고발뉴스TV -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 김재련 변호사 정치적 음모

7월 28일 피해자측 인권위에 직권조사 요청,

7월 30일 법원 박원순 폰 포렌식 중지

8월 06일 서울신문 곽병찬 칼럼

8월 10일 열린공감TV 떴다!, 박원순 찢어진 각본에 희생됐다.

8월 19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여성단체 감사원에 공익감사 요청 '사적노무, 서울시 공용폰에 대한 감사등

8월 13일~ 서울시 전직 비서실의 주장 '전보요청, 성추행 고통 들은 적 없다'

9월 12일 열린공감TV - 피해자에 대한 거짓 증언 (업무인수인계서 등)

4. 피해사실에 대한 진실 정리

9월14일 김재련 변호사 인터뷰 : 한겨레21, KBS 최강시사

수사 진행상황, 피해자 핸드폰 포렌식 중, 피해자 지원단체와의 연대 등

9월 14일 열린공감TV 피해자 사진공개

9월 15일 고발뉴스 - 김재련 변호사 인터뷰 반박

9월 17일 열린공감TV 피해자 영상공개

9월 21일 ~ 한겨레, 경향신문, 세계일보 "도 넘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9월 25일 <한국일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인터뷰, 오성규 김주명의 조사불응

9월 27일 김민웅 교수 페이스북, 피해자에게 공개서한, 피해자가 직접 나와라

9월 28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여성단체 서울시 공개질의서 제출

10월 5일 <한겨레>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를 의심하는 분들에게/전직 서울시 미디어비서관

10월 8일 - MBC 입사시험문제

10월 15일 ~ 국정감사, 박원순 사망 100일째 진상규명 감감, 서울시 비서 성폭행사건

5.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재보궐 선거

11월 2일 민주당 이낙연 대표, 서울시, 부산시 당헌당규 개정 통해 재보궐 선거 공천키로

11월 4일 <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은 살아있는 박원순이다

<한겨레> 후보자공천, 누구 맘대로 하고, 안하나

11월 5일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성인지감수성 집단학습기회

11월18일 민주당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기획단장 김민석 - 성추행 사건, 법적으로 옳고 그름 판단 안나

11월19일 서울시의회, 정의당 권수정 의원 박원순 사건에만 침묵하는 서울시

12월 9일 박원순 피해자 실명 SNS에 유포 '구속구사 필요'1인시위

이렇듯 언론보도와 달리 인터넷 매체,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기획미투, 음모론 등 광범위한 왜곡과 거짓정보로 여론을 주도하려했다. 이런 거짓여론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서울시의 전직 비서실과 더불어민주당 열성지지자들이다. 서울시의 전직 비서실은 진실을 말하는 순간 자신들의 과오가 드러날 것이고, 내일 인권위의 조사결과가 나오더라도 끝까지 사실을 은폐하기로 결의한 집단으로 보인다. 고발뉴스, 열린TV공감은 여론을 호도하는 정치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에 대한 2차가해 짚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목적은 내년 재보궐 선거의 승리이다.

인권과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현장에 '박원순'이 있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은 7월 22일 2차 기회회견을 전후로 정치투쟁으로 변모했다. 박원순 시장과 함께 했던 사람들과 그의 지인들, 그리고 그의 성폭력 사건을 믿고 싶지 않아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거짓선동을 한다. 피해자와 그 변호인의 인권을 짓밟고, 음모론자로 만들어 사건의 진실을 마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오더라도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까지 진실을 가리고 거짓선동을 하는 자들의 준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은 위력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 정치투쟁이 되었고, 진실을 밝히는 일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가 되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사라지고, 여성들이 직장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와도 직결되어있다.

우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들은 2021년 재보궐 선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공론장과 ‘진보’의 재구성 : 지자체장 위력 성폭력 관련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김수아(서울대 언론정보학과/여성학협동과정)

1. 들어가며

‘위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인식은 어떠한가? 2018년 미투 운동 당시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에 대한 고발이 이어질 때 우리 사회는 위력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때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한 분석이 수 차례 이루어진 바 있는데, 양적 분석을 기반으로 한 프레임 분석 틀에서는 책임 귀인의 문제가 다루어졌다. 분석 결과, 미투 운동 시기 내내 보도의 경향은 “미투 발화자의 언어를 검증하고 성폭력 폭로 배경을 의심하면서 ‘거짓을 가려내는 가늠자’ 역할”(전가영, 유세경 2020:91)을 담당했을 뿐이라고 지적되었다. 특히 미투 보도에서 우리 언론은 뉴스 공급원에 의존하는 방어적 전략을 쓰면서 위력과 성폭력의 문제를 다루어 사건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실패하였다(전가영, 유세경 2020). 김효영(2019) 역시 보수 신문과 진보 신문, 그리고 여성 신문의 프레임을 시기별로 변화를 보면서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고, 가해자 대 피해자의 진실 담론 경쟁 구도를 만드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미투 보도를 연합뉴스를 중심으로 분석한 장은미(2019)는 보도의 관점이 기자에 따라 균질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같은 날 2차 피해를 지적하는 기사와, 가해자를 옹호하는 기사가 동시에 올라오는 예가 대표적이다.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언론 보도에 있어 과거 문제가 되어 왔던 점은 피해자의 신원이 누출되는 것,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대표적이었다. 피해자의 신원이 공표된다는 것은 성에 대한 보수적 시각과 성폭력 피해에 대한 여성 책임론이 일반화된 한국 사회에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더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 보도와 관련된 저널리즘 윤리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미투 운동 당시 피해자 스스로 신원을 밝히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 경우에도 언론이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경험할 2차 피해의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설명하였는지가 중요한 윤리적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한편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보도는 매우 일상화된 보도 양식 속에서도 반복되는 것이었다. 여성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면 안 되는 보도 양식”에 대해 카드 뉴스 등의 형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해 왔지만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오는 성폭력 범죄 보도 방식의 문제에 더해, 피해자가 드러난 미투 운동 보도에서는 더욱 더 개인에 대한 공격과 2차 가해가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보도 양식을 통해 구성되는 ‘진실’의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가해자와 그 지지자들의 성폭력 사실 부인이다(권명아, 2020). 조직을 보호하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만, 가족의 형태를 빌어 그 목

소리가 전달되는 경우도 있다(안희정 사건의 경우). 이러한 부인의 형태는 형식적 객관주의를 표방하는 언론의 보도 양식(스트레이트 보도), 혹은 사건의 틀을 정치 의제화하는 보도 양식(해설, 기획 보도)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글은 이러한 보도 방식과 언론사의 인적 구조가 야기하는 한계를 짚고 서울 시장의 위력 성폭력 관련 보도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미디어의 성폭력·성희롱 관련 보도 방식과 문제점

여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가 마련한 2018년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¹⁾은 그간 미디어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것을 정리하여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97쪽 분량의 부록을 포함한 별도 해설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그간 미디어의 보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부분에 대해 간략한 체크 리스트를 통해 기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부적절한 묘사, 가해자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표현 등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기사 작성 만이 아니라 취재 시 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주의 사항, 그리고 보도 시 개인이 아닌 구조의 문제에 주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지도가 기자 사회에서 높지 않고, 스트레이트 기사 형식으로 “누가 말했다”는 것을 제시할 때에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해당되지 않는 기사 장르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가이드라인이 문제적 사례로 언급하는 것을 언론이 정말 문제로 인지하고 있는지 역시 중요하다. 사실 언론은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다기보다는 문제적인 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기사를 파는 데 집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특히 포털 서비스 중심으로 뉴스가 소비되면서 기사 제목을 통해 클릭을 유도하는 상황에서는 가이드라인보다 상업적 이익이 중요해지게 된다.

이렇게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성폭력 보도는 비난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따라 보도의 유형과 보도 방식을 달리하게 된다. 닐슨(Nilsson, 2018)은 성폭력 보도를 분류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무엇인지, 비난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것인지에 따라 성폭력 사건 보도의 레토릭을 구사하고 장르화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특히 이는 가해자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가해자가 유명인인 경우, 명성 때문에 언론이 주목하게 되는데 Waterhouse-Watson(2013:35)은 이 자체로도 성폭력 책임에 대한 서사적 면책(narrative immunity)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해링턴(Harrington 2016: 92)은 성폭력 보도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주제로 가해자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방식들, 헌신적인 지지자를 보도하는 것, 혐의의 사소화와 피해 여성에 대한 비하를 표현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2차피해 문제나 강간 신화 등을 다루는 주제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한다.

미투 운동과 관련된 보도에서 가해자가 유명인인 경우, 언론의 문제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주현(2018)은 피해 상황과 피해자의 심경에 대한 상세한 묘사, 가해자의 말과 행동 등을 부각하면

1) 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1

서 선정성이 높은 보도를 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폭로 저널리즘의 속성을 보이면서 가해자가 제시한 변명을 그대로 전시하는 문제를 보였다. 최이숙, 김은진(2019)은 미투 운동 보도에서 구조적 접근이 소폭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것이 진보 언론과 관련된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사건 자체와 선정주의적 접근이 반복되고 있는 점 역시 한계로 지적한다.

‘사건’을 보도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여성주의 관점에서 성폭력 관련 보도의 문제를 볼 때 가장 문제 되는 것은 사건 기반 강조 방식이다. 사건의 해결이 문제의 해결인 것은 맞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인식하기보다는 특정 비난이나 개별 사안의 판단이 중요해지는 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다(Kitzinger 2009: 98). 그래서 저널리즘이 단지 객관적 사건의 전달이나 사실의 전달이라는 인식은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 사회의 이데올로기 구조를 전달하는 내적 동학 속에 사건의 전달 순서와 보도 아이템 선정 자체가 특정한 효과를 갖는다. 예를 들어 언론이 초점 자체를 사건의 세부 사항이자 뉴스를 위한 이벤트들(변호사의 발언이나 사건의 법적 세부 조항)로 옮기게 되면, 의도치 않게 가해자를 사건으로부터 희미하게 만드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가해자의 평소 업적이나 사건 외부의 사항으로부터 가해자가 알려질 때, 그러하다(Royal 2019: 95-96).

이러한 논의로부터 시사점이 있다면 현재의 성폭력 성희롱 범죄 보도 가이드라인 즉 “사건에 대한 구조적 관점”을 강조하는 것, “가해자에 대하여 옹호적인 내용을 보도하지 말 것”과 같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구조적 관점으로 무엇을 드러내야 하는가, 그리고 옹호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3. 미디어 조직 구조의 문제와 ‘젠더-에디터’

미디어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보도 방식에서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상당 부분 인적 구성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여성주의 미디어 연구자들은 뉴스 생산의 젠더화된 과정과 속성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비록 여성 기자의 수나 여성 정보원의 수가 늘었다고 해도, 여성의 목소리와 경험은 여전히 남성에게 비해 적게 등장한다. 뉴스룸의 관행이 여전히 남성 중심적이기 때문이다(Ross & Carter, 2011).

이는 국내 미투 운동 이후의 언론사 변화에 대한 논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김세은, 장은미, 최이숙(2019)은 “젠더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더 새롭게 만들어 보라는 데스크의 요구는 정치·사회·경제 분야의 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젠더 관련 이슈를 저평가하는 무의식 과도 연결된다”(144쪽)면서 남성 중심적인 언론사의 의사 결정 구조 변화에 대한 요구 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인 성별 분포는 매우 중요한데, 피해자에 대해 언론이 2차 가해를 하는 것은 여성의 성별 규범에 대해 강조하는 방식으로 남성 권력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홍지아, 2016). 언론사의 가부장제적 인식 재생산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가 객관 보도 원칙, 업무량의 문제, 일일 매체의 특성 등 때문에 발생한다(홍지아, 2016).

한편 김세은, 홍남희(2019)는 여성 기자 인터뷰를 통해 우리 언론의 조직문화의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특히 상부 조직에 여성이 존재하는가를 매우 중요한 핵심 문제로 꼽았다. 대다수 언론사들에서 편집회의 등 보도 관련 중요 회의에 참석하는 여성 기자와 간부 비중이 낮고, 일선 기자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미투 운동 초기 남성 간부급이 이슈를 담당하는 한계가 분명했다. 중년 남성 세대의 감수성은 미투의 문제제기나 청년 여성들의 디지털 성폭력 관련 문제 제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보도국이나 데스크의 기준을 세우지 않고 있고, 기사 방식과 최종 기사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역량에 기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김세은, 홍남희 2019). 무엇보다 한국 언론의 고질적 조직 문화 문제로는 수습기자 시절의 교육 관행 문제로,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이 가치와 윤리에 대한 교육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황비웅, 장환영. 2020).

이러한 상황에서 미투 운동 이후 언론의 성인지 감수성 문제와 관련하여 제안된 제도적 대안 중 하나는 젠더 데스크이다. “젠더 데스크”의 존재는 기사 작성에서 성평등한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이자,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언론사의 조직 구조에 제도적으로 개입하여 편집 과정 및 간부 회의 과정에 개입하게 되는 일로 매우 중요하다. 다만 실제 운영에 있어, 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 기자들에게 과부하가 될 수 있고, 조직 자체가 변화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면하기 위해 여성 기자들을 리트머스지처럼 활용하게 될 우려가 있고, 실제 권한이 많이 부여되지 않는다면(즉, 적극적 편집권이 주어지지 않는) 말 그대로 책임 면제의 용도로 여성 기자들을 내세우는 것이 될 수 있다. 제도적으로 갖추어진 상황이라면 좀 더 많은 것이 가능하겠지만, 몇몇 언론사들은 내부적으로 소수의 여성 기자에게 사적 의뢰의 형태로 성인지 감수성을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 젠더 문제를 여성에게만 의뢰하고, 주류 뉴스와 젠더 뉴스를 분리하며, 주류 뉴스의 조직과 편집은 여전히 중년 이상의 남성 중심 구조에서 담당하는 문제인 것이다.

부연하자면, 이러한 경향은 조직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 가운데 판단을 의뢰한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기자 조직이 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노력하는 가운데 어렵거나 혼란스러운 점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기사가 논란이 되지 않을지를 확인하는 리트머스지로 여성 기자 혹은 젠더 데스크를 활용하기만 하고, 조직은 변화가 더딘/ 혹은 변화하지 않으려는 경우를 말한다. 게다가 리트머스지가 필요한 기사 주제와 영역을 정해 두고 그 주제나 영역에 젠더 담당 기사를 호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면 한겨레의 칼럼 사태 등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댓글 문화의 문제 역시 성평등 보도 및 조직 구조의 변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상호작용을 보장하는 댓글 문화는 여성 기자의 한계로 작용하기도 한다. 사라 버넷와이저(Sarah Banet-Weiser, 2015)는 코멘트와 피드백이라는 구조 속에서 페미니즘과 여성혐오는 서로 전화 응답처럼 자동으로 산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좌파와 자유주의 의견 모델은 비의도적이지만 음모 이론에 조응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한다(Brooks. 2010). 이러한 맥락에서 수용자의 의견을 댓글로 인식하게 되면, 조직의 입장에서 성평등 보도 관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내보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댓글로 인한 여성 기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조직이 보호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4. “가해자”에 대한 서사적 면책과 남성 동성사회

앞서 가해자의 업적을 조명하거나 가해자가 유명하다는 것 자체로 서사적 면책이 되는 사회의 인식 구조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즉, 위력 성폭력·성희롱 사건에서 고정관념이 발동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가해자의 평판이다. 이번 서울시장 사건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 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보도에서 그가 생전 ‘진보’진영의 대표적 인물이었다는 것, 그리고 정치인이었다는 점에서 서사적 면책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언론 보도는 고려해야만 했다.

특히 이러한 서사적 면책은 가해자가 유명인인 것뿐 아니라 ‘진보’의 윤리에 관련되어 정치화되는 데에서 발생한다. 정치화는, 김효영(2019)의 분석에 따르면 성폭력 문제를 성폭력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명 진보 정치인의 몰락, 정치 갈등, 진보 정당의 문제로 축소하는 것 등으로 나타나고, 정치계 남성 동성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재로 진보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다루어졌다는 의미이다. 여기에 정동적 개입이 일어나는데, 권명아(2020)는 이러한 구도 속에서 소위 ‘진보’세력은 우리편과 선함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갖고 성폭력을 부인하는 부인의 정치학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였다.

유력 정치인이 개입되고 정치 세력간 갈등이 분명한 사안일수록 성폭력·성희롱 문제보다는 “남성 동성 사회에서의 ‘정치적 아젠다’(김효영, 2019:110)”가 된다. 이에 따라 일차적인 목표가 동성사회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나타나게 되어, 서울 시장 사건에서도 동성 사회의 안정성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다. 권명아는 “지방자치 단체장 성폭력 사건은 시작도, 끝도 조직 보위 문제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구조와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지 않는(못하게 만드는) 구조가 동일하고, 그 구조는 조직보위에 의해 규정된다(권명아, 2020: 106)”고 하였다.

보수 언론과의 아젠다 경쟁은 이러한 맥락에서 조직 안정성을 중심으로 의제를 설정하게 만들 수 있다. 보수 언론은 서울 시장 사건을 진보 세력의 문제로 프레임하고, 현 정부와 여당이 책임을 져야 하는 정치적 책임론을 부각하였다. 이러한 구도는 현 정부 이후 열성적인 팬덤 정치-언론의 역동, 유튜브 등의 매체가 보수 성향의 중장년 시청층에게 호소력을 갖게 된 점 등 다양한 매체 변화와 사회 현실의 변화가 관련되어 있다. 특히 2019년, 조국 사건 이후로 386세대에 대한 비판과 청년 대 386이라는 세대 대결 담론 등이 형성되면서 기존에 보수 언론이 좌파인 386세대에 대한 비판을 지속해 오던 것이 진보 언론에까지 이르러 진보 세력을 기득권 집단으로 보는 담론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신진욱, 2020). 이에 기반을 둔 언론의 프레임은 사건 외부 담론과의 연계 속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직장 내 성차별 구조에 대한 문제를 정치적 아젠다로 전환하게 만든다. 진보 세력의 위선으로 성폭력 문제를 도구화하는 한편, 이와 적대하는 진보 세력은 성폭력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이를 대응하게 되는 것이다.

보수 언론의 경우, 처음 의제화 방식 자체가 정치화였다. 조선일보를 예로 들면, 여권의 정치 권력 구도를 문제화하는 기사, 부산 시장의 사례와 연결해 진보 여당의 윤리적 문제를 부각하는 기사가 가장 먼저 송고되었다. 이는 중앙일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을 미투로 명명하고 여권 단체장 3인

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보수 언론 역시 다양한 반응을 가십성으로 보도하는 경우는 애도를 중심으로 보도하였고, 한겨레의 경우 초기 보도에서 애도의 내용을 게재하였는데 이러한 애도가 일종의 서사적 면책 기능을 한다는 것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 특히 애도는 전부 따옴표 내에 포함되어 생생한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된다는 인식을 가져오게 했으며, 공동체적 감각과 애착을 드러내게 했다. 결론적으로 공동체적 기억을 환기하는 방식으로 서사적 면책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애도의 흐름을 가장 적게 지면에 송출한 경우는 경향신문이다.

일반적으로 권력형 성폭력 문제에서는 가해자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공고한 인식 구조 속에서 피해자가 조직의 배신자로 혹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폭로자로 의심되는 방식으로 담론화되어 문제인데, 애도의 맥락 속에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명을 사용하는 것은 이를 축약하여 보여주는 방식이었다. MBC의 시험 문제는 가장 명백한 형태의 '진보' 남성 동성사회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MBC의 신입 기자 선발을 위한 논술시험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 제기자를 피해자라고 칭해야 하는가, 피해 호소자라고 칭해야 하는가 (제3의 호칭도 상관 없음)' 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 출제된 MBC 측은 사건의 파악과 논리적 사고력을 보기 위한 문제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는 이 사건에서 '피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식이 바탕에 깔린 것으로, 정당한 애도를 방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를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식이었다. MBC 기사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충돌은 기자 집단과 간부 집단 간의 인식 차이이자 세대로 표상되는 '진보 세력'과의 격차를 드러내는 장면이 될 수 있다.

한편 가해자를 서사적으로 면책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신화적 인식 구조가 결합되어 있는데, 성폭력 가해자는 사회에서 배제되어야 마땅한 낙오자라는 인식, 그리고 성폭력 가해의 정도를 누구나 판단할 수 있다 - 즉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식할 수 있다는 인식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 시장이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어야 할 낙오자일 수 없으며 그가 평소 명망있는 자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가해자임을 부인하는(혹은 성폭력과 성희롱이 사소화되고 중요해지지 않는) 서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의 생전 업적이나 공을 중심으로 생애를 서사화하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지인의 고백'들이 이어지고, 애도의 수사들이 전달될 때, 공과 과를 구분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 자체가 면책의 효과를 갖게 된다. 한겨레 신문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작성된 조희연 교육감의 글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정동 즉 사회적 결속감을 만들어내기 위한 강력한 애착으로서의 정동(허성원, 2019)은 가해자의 성희롱 혐의에 대한 부인이라는 적극적 형태로 나타나며, 모순을 용인하고 부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받아들이면서 애착을 고수하는 형태로 등장하게 되었다. 근거가 없는 음모론에 대한 애착은 진보인 나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유지된다. 이러한 경향은 주로 민주당 지지자를 중심으로 하는 페이스북,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드러났다.

한편으로 애착을 가진 진보-남성 동성사회는 이 애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수 언론이 옹호하는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 세력)이 문제라는 이분법적 선악 구도 속에 피해자를 두기 때문에, 피해의 문제는

논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더 나아가 성희롱, 성폭력 피해는 누구나 알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가 실제로는 피해가 아니라는 주장이 등장한다. 이는 이 행위가 성희롱, 성폭력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인데, 끈대질 혹은 갑질 등으로 표현될 수는 있으나 성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보수 언론이 피해자 기자회견의 문장을 그대로 제목에 따옴표로 올렸을 때에는 해당 행위가 가법다면 성희롱 피해가 아니라는 댓글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폭력 묘사를 하지 않은 경향 신문 등의 기사에는 그래서 그 피해가 무엇이길래 밝히지 못하냐는 비아냥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자 회견에 공개한 범치는 매우 사소하고 수위가 낮은 것이라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마치 진짜 범치는 가려져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여 여권의 은폐라는 음모론과 연결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SBS의 피해자가 더 있다는 발언을 심의할 때, 피해자가 하지 않은 말임이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측 의원이 “언론이 여권을 비호하기 위해 피해자가 더 있다는 사실을 축소하려 한다”는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이러한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다.

즉, 이 사건의 경우 피해가 피해가 아니라는 부인은 진짜 피해가 무엇인지를 피해 행위의 묘사를 보면 판단할 수 있다는 인식이 꾸준히 사회적으로 유통되었고, 언론 보도가 이러한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범죄만큼이나 피해자가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운 범죄도 드물다. 성폭력 피해에 대한 꽃뱀 신화와 무고에 대한 두려움이 남성 연대의 중요한 정서적 구조를 차지하고 있다(김수아, 2018). 타자의 - 그리고 여성의 성적 ‘피해’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자신감은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부인의 정치를 말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진실을 판단할 수 있다는 남성 동성사회의 인식은 무엇이 진실인지를 이미 확정하고 있는 확증 편향의 구조 속에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진실화하는 담론적 권력을 내면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성 동성사회에서 위력의 구조는 전혀 문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직장 내에서 위력 문제와 연관된 폭력임은 비가시화되고, 남성 대 여성이라는 맥락으로부터 분리 가능한 절대적 위치가 있는 것으로 상정된다. 그리고 이 위치에서 객관적인 입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와 폭력을 구분할 수 있고 진짜 폭력과 거짓말을 분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젠더 권력 구조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남성 동성사회의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5. 따옴표 저널리즘과 2차 피해의 확산

정치화는 이러한 애착을 보도하고 사건화하는 데에서도 나타나는데, 보수 언론은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 주장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면서 이를 제목에 인용 보도를 하는 등을 통해 갈등을 부각하고, 진보 세력의 파렴치함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이를 위치 지웠다. 이는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 문제를 야기한다. 굳이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아도 되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개인 페이스북의 글들을 일일이 퍼올리는 보도 방식은 동성사회의 적대 속에서 여성의 피해를 공격을 위한 자원으로 삼는 것에 불과하였다.

보수언론은 누가 발화하지 않았는가를 중요한 의제로 삼았다. 주로 여성 정치인과 유명인을 겨냥한

이 기사들은 진보 세력의 모순과 위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면서 동시에 젠더화된 것으로, 여성의 문제에 여성이 발화하지 않는다는 식의 공격 구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정작 여성의 목소리나 시민단체의 발화는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방식을 보인다. 정치화된 구도에서 진짜로 비판하려 하는 것이 젠더 권력의 구조가 아니므로, 이러한 목소리는 오히려 사라지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애도의 수사를 모두 중계하였고, 더 나아가 지지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매개한 것도 보수언론들이다. 해링턴(Harrington 2016)의 지적처럼, 유명인이 개입된 성폭력 보도에서 가해자의 서사화와 더불어 문제적 보도 유형 중 하나는 지지자의 목소리이다. 보수언론은 지지자의 목소리들을 의제화하였고 이를 추후 진보 세력의 위선으로 비판하는 식으로 활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이루어졌다.

특히 신상을 폭로하려는 일부 온라인 공간의 시도를 실시간으로 중계함으로써, 대중의 인식을 신상을 드러내지 않은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유도하기도 하였다. 신상 폭로가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 신상 폭로 장면을 중계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2차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하기 위해 2차 피해를 전시는 방식으로 보도하였다. 이런 보도들은 일부 온라인 공간의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는 것에 불과하여, 사실상 취재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또한 서울시 측에서 피해를 부인하는 말과 대응을 따옴표를 통해 전달하는 보도도 상당수 이루어졌는데, 따옴표는 객관성을 가장하는 방식이지만 사실상 실제 발언도 아니며 대체로 기자의 의도대로 축약된 표현들이 따옴표에 들어간다. 직접 말한 것 같지만 사실상 직접 발화가 아닌 말들이 제목으로 전달되면서, 제목만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뉴스 소비자들에게는 진실 공방을 한다는 인식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부정적 인식을 남기게 된다(명확하지 않은 피해를 두고 다투고 있다는 인식). 진실 공방과 따옴표를 통한 전달은 피해를 사소화하거나 피해 존재 자체를 문제로 만들어 버리는 효과를 갖는다. 이제까지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법정 보도 들은 대체로 대중들이 가해자가 친숙하다는 이유로 더 많은 공감을 하게 되는 상황을 유도하고 법정의 세부 사항들을 모두 사건화함으로 해서 이 폭력의 구조와 여성의 피해에서부터 주목을 흐트리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Waterhouse-Watson, 2016). 즉, 말을 사건화하는 따옴표 저널리즘은 그 사건화가 주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도하고 사건의 해결이 아닌 비난의 대상을 지정하는데 사용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보도의 특성, 데일리 기반의 저널리즘 특성이 이러한 사건화를 불가피하게 한다는 반론이 가능할 것이다. 사실상 구조적인 접근으로 기사를 작성하기에는 기사 작성의 시간이나 기사 송고 구조, 기사의 분량 등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저널리즘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더라도, 특정한 누군가의 말이 사건이 될 때 보도 가치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가 논의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무엇이 비판의 대상이고 무엇이 해결책이 되어야 하는가? 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대체로 보수 언론이 전달한 ‘말’은 위력 성폭력의 구조와 관련되어 있다기 보다는 진보 세력과 야당 간의 설전이나 대결 구도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보수 언론이 진보 세력의 위선을 비판 대상으로 설정하게 되는 문제는 닐슨(Nilsson, 2018)의 지적을 참고하여 볼 수 있다. 닐슨은 강간의 문제가 남성의 문제가 되지 않고 해결책이 강간을 막기 위한 방식으로 내려지지 않는 점을 논의하였는데, 보수 언론의 비판 대상 설정은 문제를 성폭력 자체가 아닌

다른 비판의 대상을 구성하여 해결책 자체도 젠더 권력 구조와 관련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만든다. 남성의 문제나 젠더 권력 구조, 더 나아가 이번 서울 시장 사건과 마찬가지로 위력의 구조나 직장 내 남성 중심 문화가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화 자체, 적대하는 남성 동성사회를 무너뜨리는 계기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따옴표 저널리즘은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이동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장은미(2019)가 연합뉴스 안에서의 관점 충돌을 지적한 바와 같이, 진보 언론 일부에서도 관점 충돌이 드러난다. 따옴표를 통해 2차 피해가 될 수 있는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보도가 이루어지지만 한편으로는 위력 성폭력의 구조를 분석하고 젠더 관점을 강조하는 기사들이 등장한다. 이는 정치와 여성으로 구분된 기사 섹션 구분 그리고 기자의 차이가 야기하는 것이다. 정치 섹션에서는 정치인과 유명인의 발화가 기사 가치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고, 이러한 발화가 가질 수 있는 효과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한 영역이 한정되어 이해되는 한계들이 이에 반영되는 것이며, 심지어 성희롱, 성폭력과 같은 젠더 권력 구조에 대한 기사 조차도 정치 영역일 경우는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영역 분리가 문제가 된다. 진보 언론들이 적극적으로 성평등과 위력 성폭력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 기사가 사회-여성으로 배치될 때 교묘한 방식으로 젠더 영역의 게토화가 이루어진다. 조직 내의 남성 동성사회성이 도전받기 어려운 구조가 여전히 힘을 갖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6. 공론장의 재구성?

언론 조직 구조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꼰대’와의 갈등으로 그려지는 듯 하다. 최근 한국 언론 재건축이라는 제하로 특집을 구성한 <신문과 방송> 기사, “전문가 삼고초려 해놓고, 팀장은 편집국 꼰대로”에서는 언론이 개혁을 원한다면서 외부에서 영입을 통해 변화를 꾀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사 순혈주의나 편집국의 경직된 조직문화가 문제가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 문화의 개선은 언론과 저널리즘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 문화는 단지 특정한 시기에 태어난 집단으로서의 세대 간 갈등 문제라기보다는, 세대가 표상하는 가치와 이념의 충돌이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미디어 가치와 이념의 이슈는 종종 진보대 보수, 좌파와 우파라는 이념적 지형으로만 설명되는 것처럼 보인다. 팩트 체크나 집단 편향과 관련된 처방은 이념적 지형에 대해 객관성을 가장하여 부인하기 보다는 편향을 인정하고 사실과 맥락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편향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감추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 편향성 차트 같은 것들을 통해 미디어 정보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미디어 리터러시로 간주되기도 한다.²⁾ 즉 공론장은, 편향된 정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2)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미디어 편향 차트 접근이 있다.

<https://www.poynter.org/fact-checking/media-literacy/2020/should-you-trust-media-bias-charts/?fbclid=IwAR3EehnS4HamrLy7XJQonj1hCnxpgG3waZfaJgQ6dnabDGABb-st-h-Tiwc>

시민과, 편향에 대해서 객관성을 가장하여 감추기 보다는 최대한 많은 사실과 맥락을 제공하는 언론에 의해 구성된다는 상상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성차별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할까? 남성중심적 사회 구조, 인종, 민족, 성적 지향성과 계급 등의 다층적이고 다변화된 차별의 문제는 편향의 당연한 부분인가? 진보가 더 성평등에 가까우리라는 가정은 현재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언론은, 특히 언론은 성차별을 가리고 젠더 권력의 구조를 문제시하기보다는 정치화의 문제로 성폭력을 다루며, 최대한 젠더 문제를 관련된 비난 구조와 대안의 제시에서 비가시화하는 방향으로 의제를 설정한다. 그러므로 이 또한 편향의 문제이지만, 단지 편향이 있다고 인정하는 데에서 머무를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관점, 저널리즘의 공적 기능 문제에서 항상 젠더 이슈가 생략되어 있음을 비판해 왔던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미디어 편향성 차트를 성차별과 관련하여 그린다면, 그것은 어떤 모양이 될까? 그리고 그때 여러 사실과 맥락을 제공하여 뉴스 소비자가 판단하게 하겠다는 전략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그것은 우리 공론장에서 언론이 하는 역할과 의미에 어떤 함의를 갖게 될까. 편향된, '정치화'의 세계에서 공론장을 이야기할 때, 젠더 리터러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계속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젠더-에디터를 여성의 영역에 한정하지 않는 저널리즘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권명아(2020). 성폭력 부정주의와 젠더 부정주의의 집단세력화와 정동 정치. 한국문화연구학회 여름정기학술대회 발표문. 97-116.
- 김세은, 장은미, 최이숙(2019). <젠더 이슈 보도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보고서
- 김세은, 홍남희(2019). 미투 운동(#Metoo) 보도를 통해 본 한국 저널리즘 관행과 언론사 조직 문화. <미디어, 젠더 & 문화>, 34(1), 39-88
- 김수아(2018). 남성 중심 온라인 공간의 미투 운동에 관한 담론 분석. <여성학논집>, 35(2), 3-35.
- 김효영(2019). 미투 운동에서 '객관적 진실'의 딜레마 : 안희정 사건 관련 담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진욱(2020). 세대불평등 담론의 정치적 계보와 의미론 : '386' 담론의 구조와 변화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1990~2019년. <경제와사회>, 126, 407-442.
- 장은미(2019). <한국의 '미투(#MeToo)'에 대한 <연합뉴스>의 보도 분석>. 뉴스통신진흥회 연구보고서
- 최이숙, 김은진(2019). 누구의 목소리를 어떻게 전하였는가?: 인터뷰 기사를 통해 본 미투 운동 초기 TV 보도의 양상. <미디어, 젠더 & 문화>, 34(2), 147-189.
- 홍주현(2018). 뉴스생산 환경에 따른 방송 보도의 선정성 네트워크 분석 · 프레임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권 7호, 103-119
- 홍지아(2016). 여가자들이 경험하는 직업과 성/젠더의 관계와 양성평등적 뉴스생산에 대한 인식. <한국여성학>, 32권 3호, 27-59
- 황비웅, 장환영. (2020). 언론사 조직 문화의 특성과 관행이 기자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러티

브 연구. <기업교육과 인재연구>, 22(2), 61-88.

Harrington, C. (2016). Feminist Killjoys and Women Scored: An Analysis of News and Commentary on the Sexual Violence Allegations Against Julian Assange. *Feminist Criminology*, 13 (1), 87-111.

Kitzinger, J. (2009). Rape in the Media. In *Rape: Challenging Contemporary Thinking*, edited by M. Horvath, and J. Brown, 74-98. London: Willan Publishing.

Nilsson, G. (2018). Rape in the News: On Rape Genres in Swedish News Coverage. *Feminist Media Studies*, 1-17.

Royal, K. (2019). An Analysis of a High-profile Rape Trial: The Case of UK Footballer Ched Evans. *Journal of Gender-Based Violence* 3 (1), 83-100.

Waterhouse-Watson, D. (2013). *Athletes, Sexual Assault and 'Trials by Media': Narrative Immunity*. New York: Routledge

Waterhouse-Watson, D. (2016). News Media on Trial: Towards a Feminist Ethics of Reporting Footballer Sexual Assault Trials. *Feminist Media Studies* 16 (6), 952-967.